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 방지 대책 지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최종보고서)

2025. 7. 30.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차례>

요약	1
I. 조사 개요	2
1. 조사 배경	2
2. 조사 설계	2
3. 조사 내용	2
4. 응답자 특성	3
II. 조사 결과	5
1. 지침에 대한 인식 차이	5
2. 지침으로 인한 업무 증가에 대한 인식	6
3. 교차 분석 결과	6
4. 자유 의견 분석	15
III. 종합 분석 결과	22
1. 핵심 발견사항 요약	22
2. 회계사고 근절 지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2
IV. 결론 및 제언	26

요약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 방지 대책 지침 설문조사 결과 요약

2025.07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조사 개요

- 대상: 경북교육청 지방공무원 1,305명(재직자 4,428명 중 29.5% 응답)
- 기간: 2025.7.16 ~ 7.22
- 방법: 온라인 설문(정량/정성 병행), 교차분석 및 자유의견 분석

□ 핵심 결과 요약

항목	주요 수치	시사점
지침에 대한 부정 응답	83.9%	실익 부족, 실효성 의문
지침에 대한 긍정 응답	11.5%	본청/지원청 등 일부 긍정
업무가 증가했다는 응답	91.3%	특히 '많이 늘어남' 30.6%
자유의견 부정 의견 비율	73.4%	"업무 폭탄", "탁상행정" 등 표현

□ 현장 주요 문제점

- 업무 과중: 나홀로 행정실 마비, 대량 거래 검수 불가
- 실효성 의문: 형식적 절차, 회계사고 예방 실익 낮음
- 갈등 심화: 교무실-행정실 갈등, 교감 결재 거부 등
- 현실성 부족: 소액(예: 포스트잇)까지 검수 요구

□ 주요 개선 제안

구분	내용
1. 단계적 시행	교육행정기관 우선 → 학교 확대
2. 금액 기준 등 도입	100만(1인 행정실 200만) 원 이상, 소모품 제외
3. 중복절차 해소	법인카드 확인서와 에듀파인 검수 중복 해소
4. 교직원 교육	교장·교감 등 회계 의무교육
5. 학교 규모별 차등 적용	1~2인 행정실 완화 기준 마련
6. 시스템 개선	에듀파인 기능 개선, 검수 알림 기능 등
7. 일몰기한 설정	현장 변화 적합한 지침을 위해 일몰 기한 설정

I .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지난 7월 8일 [지침]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 방지 대책(재무과-14185, 2025.7.8.) 공문이 발송되었고, 관내 몇 학교에 확인해 본 결과 학교마다 업무 형편에 따라 반응이 달랐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55조에 따르면 검사검수는 사업부서 담당자(공립학교회계규칙 제34조의3에 따르면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검사검수를 사업담당자에게 맡겨온 것이 아니라 세출담당자가 처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 또한 학교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기에 지역별, 학교급별로 이 지침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얼마나 큰지 조사해 보았다.

2. 조사 설계

가. 조사 대상: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 재직자 4,428명 중 1,305명 응답(응답률 29.5%)

※ 5급 이하 교육행정직 재직자 2,850명 중 1,193명 응답(응답률 41.8%)"

나.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다. 조사기간: 2025. 7. 16. ~ 7. 22.

3. 조사 내용

가. 응답자 특성[문1-8]: 성별, 직렬, 직급, 근무지, 근무지역, 학교 규모

나. [문9] 회계사고 근절 지침에 대한 의견

다. [문10] 지침에 따른 업무 증가 여부

라. [문11] 자유 의견

4. 응답자 특성

[문항1]	귀하의 성별은?	
	[1] 남	460명(35.25 %)
	[2] 여	845명(64.75 %)
[문항2]	귀하의 직렬은?	
	[1] 교육행정	1193명(91.42 %)
	[2] 시설/공업, 전산, 보건, 사서, 기록연구사, 간호, 식품위생, 해양수산	32명(2.45 %)
	[3] 시설관리, 운전, 조리	62명(4.75 %)
	[4] 사무운영, 기계운영, 전기운영, 열관리운영,	18명(1.38 %)
[문항3]	귀하의 직급은?	
	[1] 8~9급	317명(24.29 %)
	[2] 7급	567명(43.45 %)
	[3] 6급	399명(30.57 %)
	[4] 5급 이상	22명(1.69 %)
[문항4]	귀하의 근무지는?	
	[1] 단설유치원	19명(1.46 %)
	[2] 초등학교	645명(49.43 %)
	[3] 중학교	219명(16.78 %)
	[4] 고등학교	172명(13.18 %)
	[5] 특수학교	3명(0.23 %)
	[6] 각종학교	2명(0.15 %)
	[7]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178명(13.64 %)
	[8] 본청 및 직속기관	67명(5.13 %)
[문항5]	귀하의 근무지역은? (시군 구분)	
	[1] 시지역	960명(73.56 %)
	[2] 군지역	345명(26.44 %)
[문항6]	(문5 시지역 응답자) 귀하의 근무지역은? (시지역) *시지역 응답자 N=960명	
	[1] 포항	175명(18.23 %)
	[2] 경주	125명(13.02 %)
	[3] 김천	68명(7.08 %)
	[4] 안동	117명(12.19 %)
	[5] 구미	193명(20.10 %)
	[6] 영주	47명(4.90 %)
	[7] 영천	49명(5.10 %)
	[8] 상주	59명(6.15 %)
	[9] 문경	33명(3.44 %)
	[10] 경산	94명(9.79 %)

[문항7]	(문5 군지역 응답자) 귀하의 근무지역은? (군지역) *군지역 응답자 N=345명		
	[1]	의성	34명(9.86 %)
	[2]	청송	27명(7.83 %)
	[3]	영양	17명(4.93 %)
	[4]	영덕	27명(7.83 %)
	[5]	청도	22명(6.38 %)
	[6]	고령	19명(5.51 %)
	[7]	성주	23명(6.67 %)
	[8]	칠곡	63명(18.26 %)
	[9]	예천	39명(11.30 %)
	[10]	봉화	29명(8.41 %)
	[11]	울진	38명(11.01 %)
	[12]	울릉	7명(2.03 %)
[문항8]	(문4 유치원, 학교 응답자) 학교 규모는? (공무원 정원 기준) *유치원, 학교 응답자 N=1,060명		
	[1]	1명	29명(2.74 %)
	[2]	2명	191명(18.02 %)
	[3]	3명	232명(21.89 %)
	[4]	4명	258명(24.34 %)
	[5]	5명 이상	350명(33.02 %)

※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100%와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II. 조사 결과

1. 지침에 대한 인식 차이

가. 회계사고 근절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응답은 11.49%에 불과하지만 도움이 되지만 업무에 비해 실익이 없을 것이다(45.13%)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38.77%)를 합친 부정 응답은 83.9%로 많았다.

나. 그 밖에 의견 역시 대부분 부정 평가가 많아 이를 합치면 부정응답이 88.5%로 집계된다.

[문9]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 방지 대책 공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응답자 수 N=1,305명			이하 표기
[1]	회계 업무의 기준을 마련해 행정실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	150명(11.49 %)	도움됨
[2]	회계사고 근절에 도움은 좀 되겠지만 업무에 비해 실익 없을 것이다.	589명(45.13 %)	실익없음
[3]	회계사고 근절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506명(38.77 %)	도움안됨
[4]	그 밖에 의견	60명(4.60 %)	기타

※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100%와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나. [문9] [보기4 그 밖에 의견] 요약 (N=60명, 4.60%)

<부정적 의견 (다수)>

- 업무 과중: "1인 행정실 부담 가중", "소액까지 불필요한 절차"
- 실효성 의문: "형식적 요식행위", "근본 대책 없음"
- 갈등 우려: "교사 반발", "교감 업무 거부 사례"

<긍정적 의견 (소수)>

- 기준 명확화: "업무 기준이 명확해짐"
- 책임감 제고: "교원들의 서류 작성 주의 증가"

<대안 제시>

- 강력 처벌: "회계사고자 엄중 처벌 우선"
- 교육 강화: "청렴 의무교육 필요"

2. 지침으로 인한 업무 증가에 대한 인식

가. 회계사고 근절 종합방지 대책 지침으로 업무량이 얼마나 많아졌느냐는 질문에 91.34%가 업무가 늘었다고 응답한 반면, 업무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응답은 8.66%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였다.

나. 특히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응답(62.91%)이 절반을 넘어 업무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문10] 이 지침으로 학교(기관) 업무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전체 응답자 수 N=1,305명			이하 표기
[1]	업무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113명(8.66 %)	업무 증가 미비
[2]	업무가 조금 늘어났다.	371명(28.43 %)	업무 조금 증가
[3]	업무가 상당히 늘어났다.	422명(32.34 %)	업무 상당히 증가
[4]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	399명(30.57 %)	업무 많이 증가

3. 교차 분석 결과

□ 분석 개요

- **조사 목적:**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 방지 대책 지침에 대한 지방공무원 의견조사
- **분석 방법:**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활용한 교차분석
- **분석 대상:** 총 16개 교차분석 파일
- **주요 분석 문항:** 문9번, 문10번

□ 주요 변수

- **문9:** 회계 지침의 필요성/효과성
- **문10:** 업무량 증가 정도
- **교차변수**
 -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별, 직렬, 직급
 - 지역별 변수: 근무지별, 시군별, 시지역, 군지역
 - 조직 특성: 학교규모별

○ **중 분석 건수**

- 문9 교차분석: 8건
- 문10 교차분석: 8건
- 총 응답자: 1,305명

□ **통계적 유의한 항목**

○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항목** ($p < 0.05$)

질문	유의함		유의하지 않음
	매우 강함	중간	
[문9] 회계업무 기준 마련의 도움 정도	근무지별, 학교규모별, 직렬별	직급별	성별, 시군별, 시지역, 군지역
[문10] 세밀한 회계업무 처리 가능성	근무지별, 학교규모별, 직렬별	시지역, 직급별, 성별	시군별, 군지역

○ **가장 강한 유의성** ($p < 0.001$)

분석 항목	문9 (지침 효과성)	문10(업무증가)
근무지별	$p < 0.001$ ($\chi^2 = 54.19$)	$p < 0.001$ ($\chi^2 = 58.85$)
학교규모별	$p < 0.001$ ($\chi^2 = 49.94$)	$p < 0.001$ ($\chi^2 = 69.65$)
직렬별	$p = 0.002$ ($\chi^2 = 25.62$)	$p < 0.001$ ($\chi^2 = 43.48$)

○ **중간 유의성** ($p < 0.05$)

분석 항목	문9 (지침 효과성)	문10(업무증가)
직급별	$p = 0.019$ ($\chi^2 = 19.90$)	$p = 0.017$ ($\chi^2 = 20.19$)
성별	$p = 0.404$ (비유의)	$p = 0.018$ ($\chi^2 = 10.08$)
시지역	$p = 0.081$ (비유의)	$p = 0.005$ ($\chi^2 = 53.35$)

○ **유의하지 않은 항목**

분석 항목	문9 (지침 효과성)	문10(업무증가)
성별	$p = 0.404$	$p = 0.018$
시군별	$p = 0.076$	$p = 0.316$
시지역	$p = 0.081$	$p = 0.005$
군지역	$p = 0.098$	$p = 0.449$

□ 강한 유의성을 보인 항목별 응답 분포도

○ 문9 - 근무지별 ($\chi^2=54.19$, $p<0.001$)

- 8개 근무지별 응답 분포

근무지	도움됨	실익없음	도움안됨	기타	특징
본청/직속기관(N=67)	20.9%	47.8%	25.4%	6.0%	가장 긍정적
교육지원청(N=178)	20.8%	45.5%	27.5%	6.2%	긍정적
고등학교(N=172)	11.6%	49.4%	33.1%	5.8%	중간 수준
초등학교(N=645)	8.7%	43.6%	44.3%	3.4%	가장 부정적
중학교(N=219)	8.2%	45.7%	41.1%	5.0%	부정적
특수학교(N=3)	33.3%	66.7%	0.0%	0.0%	소수 응답
각종학교(N=2)	50.0%	50.0%	0.0%	0.0%	소수 응답
단설유치원(N=19)	15.8%	36.8%	36.8%	10.5%	소수 응답

※ 핵심 인사이트

- 본청/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서 가장 긍정적 반응 (20% 이상이 도움됨)
- 학교현장(초/중/고)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8-12%만 도움됨)

○ 문9 - 학교규모별 ($\chi^2=49.94$, $p<0.001$)

- 5개 규모별 응답 분포

학교규모	총원수(N)	도움됨	실익없음	도움안됨
1명	29명	10.3%	51.7%	27.6%
2명	191명	10.0%	39.3%	47.6%
3명	232명	12.5%	44.8%	37.9%
4명	258명	8.9%	43.4%	44.2%
5명이상	350명	7.1%	48.6%	39.7%

※ 핵심 인사이트

- 소규모 학교(1명)에서 가장 긍정적이지만 실익없음(51.7%) 높음
- 2인 행정실에서 가장 도움안됨 응답이 높음(47.6%)

○ **문9 - 직렬별** ($\chi^2=25.62$, $p<0.002$)

- 4개 직렬별 응답 분포

직렬	총원수(N)	도움됨	실익없음	도움안됨
교육행정	1,193명	10.6%	45.4%	39.5%
시설/공업 등	32명	34.4%	46.9%	15.6%
시설관리,운 전,조리	62명	17.7%	37.1%	40.3%
사무운영 등	18명	11.1%	50.0%	27.8%

※ 핵심 인사이트

- 시설/공업 등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34.4% 도움됨)
- 교육행정직이 가장 큰 비중이지만 상대적으로 회의적

○ **문10 - 직렬별** ($\chi^2=43.48$, $p<0.001$)

- 직렬별 응답 분포(4개 옵션)

직렬	총원수(N)	업무 증가 미비	업무 조금 증가	업무 상당히 증가	업무 많이 증가
교육행정	1,193	7.54%	27.33%	33.53%	31.60%
시설/공업 등	32	25.00%	43.75%	21.88%	9.38%
시설관리,운 전,조리	62	20.97%	41.94%	16.13%	20.97%
사무운영 등	18	11.11%	27.78%	27.78%	33.33%

※ 핵심 인사이트: 직렬에 따라 업무 증가 체감도가 극명하게 차이남

- 시설/공업,전산,보건 등: 25.0%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응답 (다른 직렬 대비 3배 이상)
- 교육행정직: 65.13%가 "상당히/많이 늘어났다"고 응답

○ 문10 - 근무지별($\chi^2=58.85$, $p<0.001$)

근무지	총원수(N)	업무 증가 미비	업무 조금 증가	업무 상당히 증가	업무 많이 증가
단설유치원	19	10.53%	21.05%	36.84%	31.58%
초등학교	645	6.20%	25.89%	34.57%	33.33%
중학교	219	8.68%	26.03%	35.16%	30.14%
고등학교	172	7.56%	25.58%	29.65%	37.21%
특수학교	3	33.33%	66.67%	0.00%	0.00%
각종학교	2	0.00%	50.00%	50.00%	0.00%
교육지원청 및소속기관	178	14.04%	38.76%	26.97%	20.22%
본청및직속 기관	67	19.40%	40.30%	22.39%	17.91%

※ 핵심 인사이트

- 본청/직속+교육지원청 vs 학교와 극명한 인식차를 보여줌

○ 문10 - 학교규모별($\chi^2=69.65$, $p<0.001$)

학교규모	총원수(N)	업무 증가 미비	업무 조금 증가	업무 상당히 증가	업무 많이 증가
1명	29	17.24%	48.28%	6.90%	27.59%
2명	191	8.90%	23.04%	35.60%	32.46%
3명	232	8.62%	29.31%	34.05%	28.02%
4명	258	6.59%	25.19%	33.33%	34.88%
5명 이상	350	4.57%	24.00%	35.43%	36.00%

※ 핵심 인사이트

- 1명(나홀로 실장) 규모 근무자가 '업무가 조금 증가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나머지는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응답해 대조적임.

□ **중간 유의성을 보인 항목들** ($p < 0.05$)

○ **문9 - 직급별** ($\chi^2=19.9$, $p < 0.019$)

- 4개 직급별 응답 분포

직급	총원수(N)	도움됨	실익없음	도움안됨
5급 이상	22명	9.1%	59.1%	27.3%
6급	399명	11.3%	50.4%	34.3%
7급	567명	13.4%	40.2%	40.4%
8~9급	317명	8.5%	46.4%	42.3%

※ 핵심 인사이트

- 대체적으로 실익없음 또는 도움안됨 등 부정적 의견
- 고위직(5급 이상)에서 실익없음 비율 가장 높음(59.1%)

○ **문10 - 시지역** ($\chi^2=53.35$, $p < 0.005$)

- 시지역 응답 분포(10개 옵션)

시지역	총원수(N)	업무 증가 미비	업무 조금 증가	업무 상당히 증가	업무 많이 증가
포항	175명	9.71%	28.00%	36.00%	26.29%
경주	125명	3.20%	17.60%	35.20%	44.00%
김천	68명	8.82%	26.47%	29.41%	35.29%
안동	117명	12.82%	33.33%	25.64%	28.21%
구미	193명	5.18%	21.76%	39.38%	33.68%
영주	47명	8.51%	27.66%	34.04%	29.79%
영천	49명	10.20%	32.65%	32.65%	24.49%
상주	59명	8.47%	33.90%	27.12%	30.51%
문경	33명	6.06%	54.55%	18.18%	21.21%
경산	94명	12.77%	27.66%	26.60%	32.98%

※ 핵심 인사이트

- 문경: 54.55%가 "조금 늘어났다" (가장 온건한 반응)
- 경주: 44.0%가 "많이 늘어났다" (가장 부정적 반응)
- 포항: 상대적으로 균등한 분포

○ **문10 - 성별** ($\chi^2=10.08$, $p<0.018$)

- 성별 응답 분포(4개 옵션)

성별	총원수(N)	업무 증가 미비	업무 조금 증가	업무 상당히 증가	업무 많이 증가
남성	460명	51(11.1%)	140(30.4%)	148(32.2%)	121(26.3%)
여성	845명	62(7.3%)	231(27.3%)	274(32.4%)	278(32.9%)

※ 핵심 인사이트

- 남성: 11.1%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 여성: 7.3%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32.9%가 "많이 늘어났다"

○ **문10 - 직급별** ($\chi^2=20.19$, $p=0.017$)

- 직급별 응답 분포(4개 옵션)

직급별	총원수(N)	업무 증가 미비	업무 조금 증가	업무 상당히 증가	업무 많이 증가
8-9급	317	8.52%	28.71%	33.44%	29.34%
7급	567	9.52%	30.34%	26.63%	33.51%
6급	399	7.27%	26.32%	39.10%	27.32%
5급 이상	22	13.64%	13.64%	40.91%	31.82%

※ 핵심 인사이트

- 5급 이상: 13.64%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낮은 체감)
- 6급: 39.10%가 "상당히 늘어났다" (가장 높은 비율)

□ **주요 발견사항**

○ **일관된 강한 영향 요인**

- 근무지별, 학교규모별, 직렬별은 정책 효과성 인식과 업무 증가 체감 모두에서 매우 강한 유의성을 보임

◦ 근무지별 핵심 패턴

근무지	문9:도움됨	문9:도움안됨	문10:증가미비	문10:많이증가
본청/직속(N=67)	20.9%	25.4%	19.4%	17.9%
교육지원청(N=178)	20.8%	27.5%	14.0%	20.2%
고등학교(N=172)	11.6%	33.1%	7.6%	37.2%
초등학교(N=645)	8.7%	44.3%	6.2%	33.3%

※ 핵심 인사이트

- 본청/교육지원청 vs 학교현장 간 극명한 인식 차이

◦ 학교규모별 핵심 패턴

학교규모	문9:도움됨	문9:도움안됨	문10:증가미비	문10:많이증가
1명(N=29)	10.3%	27.6%	17.2%	27.6%
2명(N=191)	10.0%	47.6%	8.9%	32.5%
5명 이상(N=350)	7.1%	39.7%	4.6%	36.0%

※ 핵심 인사이트

- 학교 규모가 클수록 정책 효과에 회의적이고 업무 부담 증가

◦ 직렬별 핵심 패턴

직렬	문9:도움됨	문9:도움안됨	문10:증가미비	문10:많이증가
시설/공업 등(N=32)	34.4%	15.6%	25.0%	9.4%
교육행정(N=1,193)	10.6%	39.5%	7.5%	31.6%

※ 핵심 인사이트

- 시설/공업 등 직렬이 정책 수용도 높고 업무 부담 적음

○ 차별적 영향 요인

- 성별: 업무 증가에만 유의미한 차이
 - 여성: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 32.9% (남성 26.3%)
 - 남성: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11.1% (여성 7.3%)

- 시지역: 업무 증가에만 유의미한 차이
 - 정책 효과성 인식은 지역 간 차이 없음
 - 업무 증가 체감은 지역별로 차이 있음

□ 핵심 인사이트

○ 정책 수용도와 업무 부담의 역상관 관계

- 효과 인정 집단 = 업무 부담 낮음
 - 본청/교육지원청: 정책 효과 인정 + 상대적 낮은 업무 증가
 - 시설/공업 등: 높은 정책 수용도 + 낮은 업무 부담
- 효과 의문 집단 = 업무 부담 높음
 - 학교 현장: 정책 효과 의문 + 높은 업무 증가
 - 교육행정직: 낮은 정책 수용도 + 높은 업무 부담

○ 현장-정책기관 간 인식 격차

구분	본청/교육지원청 (N=245)	학교현장 (N=1,060)	격차
정책 도움됨	20.8%	8.7-11.6%	2배 차이
업무 많이 증가	17.9-20.2%	33.3-37.2%	1.7배 차이

4. 자유 의견 분석 [문11 관련]

□ 조사 개요

- 응답자 수: 646명 (응답자 1305명 중 49.5% 참여)
- 대상: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 조사 내용: [문11]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
- 분석 방법: 근무지별, 학교규모별, 지역별 심층 분석(claude ai)

□ 전체적 응답 경향

○ 응답 성향 통계(전체)

반응 유형	응답자 수	비율	특징
부정적 의견	474명	73.4%	업무 과중, 실효성 의문, 현실성 부족
중립적/건설적 의견	130명	20.1%	개선방안 제시, 조건부 찬성
긍정적 의견	42명	6.5%	정책 필요성 인정, 원칙 확립

* 주요 키워드 빈도

- 업무 관련: "업무증가"(312회), "업무과중"(189회), "업무마비"(76회)
- 실효성 관련: "실효성없음"(145회), "형식적"(98회), "의미없음"(67회)
- 현실성 관련: "현실에맞지않음"(134회), "탁상행정"(89회), "학교실정무시"(56회)

□ 근무지별 자유의견 특성

○ 고등학교 (172명 중 101명 응답, 응답률 58.7%)

- 반응 강도: 극도로 부정적 (부정의견 70.3%, 71명)
- 특징: 중립/건설적 의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26.7%)
- 핵심 메시지:
 - "연간 3,000여 건 처리로 업무 마비 상태"
 - "1%도 안 되는 회계사고 때문에 99%가 피해받는 것은 올바른 대책이 아니다"
 - "교무실과 행정실이 아수라판이 될 것"

- 주요 문제점:
 - 대량 거래 처리의 현실적 어려움
 - **교원-행정실 간 극심한 갈등**
 - 업무 효율성 급격한 저하

○ **초등학교 (645명 중 342명 응답, 응답률 53.0%)**

- 반응 강도: 압도적 부정적 (부정의견 76.0%, 260명)
- 특징: 응답자 수가 가장 많고 부정 비율도 높음
- 시지역 초등학교 특징(N=265)
 - "빈대도 못잡고 초가삼간 태우는 지침이니 신속한 철회가 필요"
 - "기존업무의 2~3배 이상으로 업무가 가중"
- 군지역 초등학교 특징(N=77)
 - "나홀로 실장의 업무가 폭탄으로 이어집니다"
 - "선량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을 모두 범죄자로 취급"
 - "실효성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 **중학교 (219명 중 116명 응답, 응답률 52.9%)**

- 반응 강도: 압도적 부정적 (부정의견 75.0%, 87명)
- 특징: 긍정 비율이 가장 낮음 (4.3%)
- 핵심 메시지:
 - "행정실 업무만 늘어나는 비효율적 대책"
 -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민원 발생"

○ **교육행정기관 (245명 중 126명 응답, 응답률 51.4%)**

- 반응 강도: 비판적이나 건설적 (부정의견 62.3%, 48명명)
- 특징: 중립/건설적 의견 비율이 가장 높음 (27.3%)
 - 전문적 시각에서 개선방안 제시
 -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대안 제안
 - 정책 목표는 인정하되 방법론에 대한 비판

□ 직별별 자유의견 패턴

○ 8-9급 (317명 중 107명 응답, 33.7%)

- 부정의견: 80명 (74.8%)
- 특징: 실무자 관점에서 가장 강한 반발
- 주요 호소: "1인 행정실의 한계", "소액 거래까지 검수 부담감"

○ 7급 (567명 중 308명 응답, 54.3%)

- 부정의견: 236명 (76.6%)
- 특징: 실무자 관점에서 현실적 어려움 토로, 가장 높은 부정 비율
- 주요 호소: "교사 협조 부족", "결재 지연 문제"

○ 6급 (399명 중 216명 응답, 54.1%)

- 부정의견: 146명 (67.6%)
- 특징: 중간관리자 시각에서 제도 개선방안 제시, 긍정 비율 상대적으로 높음 (8.8%)
- 주요 호소: "금액 기준 필요성", "시스템 자동화"

○ 5급 이상 (22명 중 15명 응답, 68.2%)

- 부정의견: 12명 (80.0%)
- 특징: 정책적 관점에서 근본적 문제 지적
- 주요 호소: "현장 의견 수렴 부족", "단계적 시행 필요"

□ 학교규모별 자유의견 분석

○ 1명 행정실 (29명 중 13명 응답, 44.8%)

- 부정의견: 9명 (69.2%)
- 특징: 중립/건설적 의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30.8%)
- 절규: "나홀로 실장은 업무 폭탄",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 2명 행정실 (191명 중 99명 응답, 51.8%)

- 부정의견: 70명 (70.7%)
- 특징: 긍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11.1%)
- 호소: "신규 교육하면서 검수까지 불가능"

○ 5명 이상 행정실 (350명 중 176명 응답, 50.3%)

- 부정의견: 137명 (77.8%)

- 특징: 긍정 비율이 가장 낮음 (2.8%)
- 문제: "대량 거래 처리로 업무 마비"

□ 구체적 개선 요구사항 (응답 빈도순)

○ 1순위: 금액 기준 설정 (289명, 44.7%)

- 제안 금액:
 - 100만원 이상: 156명 (24.1%)
 - 50만원 이상: 89명 (13.8%)
 - 30만원 이상: 44명 (6.8%)
- 주요 의견:
 - "소액 소모품까지 검수는 현실에 맞지 않음"
 - "포스트잇 1묶음까지 검수하라는 건 비상식적"

○ 2순위: 절차 간소화 (234명, 36.2%)

- 구체적 요구:
 - 법인카드 확인서와 에듀파인 검수 중복 해소
 - 온라인 구매 시 별도 처리 방안
 - 소액 건 기존 방식 유지

○ 3순위: 인력 충원 (189명, 29.3%)

- 주요 호소:
 - "1인 행정실부터 좀 해결 해주세요"
 - "업무량 증가에 따른 행정 인력 충원 필요"

○ 4순위: 시스템 개선 (167명, 25.9%)

- 개선 요구:
 - 품의-카드 연계 자동화
 - 검수 요청 자동 알림 기능
 - 에듀파인 사용법 개선

□ 대안 제시 의견 분석

○ 처벌 강화 방안 (145명, 22.4%)

- "회계사고자 강력 처벌이 우선"
- "일벌백계로 경각심 제고"
- "파면, 해임 등 엄중 처벌 필요"

○ 교육 강화 방안 (123명, 19.0%)

- "사업담당자 대상 교육 선행 필요"
- "교감, 교장 회계 교육 의무화"
- "회계사고 사례 중심 교육"

○ 제도 개선 방안 (98명, 15.2%)

- "청렴 문화 정착이 우선"
- "회계 시스템 전면 개선"
- "현장 의견 상시 반영 체계"

□ 지역별 특성 (시지역 vs 군지역)

○ 시지역 (960명 중 481명 응답, 50.1%)

- 부정의견: 354명 (73.6%)
- 특징: 대규모 학교 업무 마비 우려, 교사 갈등 심화
- 핵심 메시지: "회계사고자 강력 처벌이 우선"

○ 군지역 (345명 중 165명 응답, 47.8%)

- 부정의견: 120명 (72.7%)
- 특징: 1-2인 행정실 한계, 지역적 고립감, 범죄자 취급 반발
- 핵심 메시지: "나홀로 실장 업무 폭탄으로 선량한 직원을 범죄자 취급"

□ 핵심 메시지 비교

근무지	대표 메시지	응답자 수/비율
고등학교	"1%도 안 되는 회계사고 때문에 99%가 피해받는 것은 올바른 대책이 아니다"	101명 (부정 71명, 70.3%)
중학교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는 비효율적 대책"	116명 (부정 87명, 75.0%)
초등학교	"빈대도 못잡고 초가삼간 태우는 지침, 나홀로 실장 업무 폭탄으로 선량한 직원을 범죄자 취급"	342명 (부정 260명, 76.0%)
교육행정 기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필요"	77명 (부정 48명, 62.3%)

□ 소수 긍정 의견 분석 (42명, 6.5%)

○ 긍정 평가 요소

- 업무 기준 명확화: "검사검수를 사업담당자가 하는게 맞습니다"(주요 의견)
- 투명성 제고: "회계사고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침임"
- 책임 명확화: "사업담당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지침"

○ 조건부 찬성 의견 (130명, 20.1%)

- "회계 운영이 너무 방만했던 것은 사실이고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인정"
- "기준은 명확해졌으나 금액 기준이 없어서 업무가 많아졌음"
- "도움은 되었지만 업무담당자의 업무 분량이 많아졌음"
- "정책 목표는 좋으나 현실적인 개선안이 필요함"

□ 가장 강력한 반발 의견

○ 감정적 호소

- "빈대도 못잡고 초가삼간 태우는 지침"
- "선량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을 모두 범죄자로 취급"
- "교무실하고 행정실하고 아수라판"

- "하루종일 카드 업무만 하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 즉각 철회 요구

- "이 지침은 취소하던지 해주십시오"
- "신속한 철회가 필요"
- "즉각 중단해야"

□ 소결 및 시사점

○ 핵심 발견사항

- 압도적 부정 여론: 646명 중 474명(73.4%)이 부정적 의견, 130명 (20.1%)이 조건부 찬성
- 현장별 격차: 초등학교(76.0%) > 중학교(75.0%) > 고등학교(70.3%) > 교육행정기관(62.3%) 순으로 부정 비율
- 공통 요구: 금액 기준 설정, 절차 간소화, 인력 충원이 최우선 과제

○ 정책 개선 방향

- 즉시 조치: 50만원 이상 금액 기준 도입
- 중기 과제: 1-2인 행정실 특별 지원, 시스템 자동화
- 장기 비전: 현장 중심 정책 수립 체계 구축

□ 제언

자유의견을 통해 드러난 현장의 목소리는 "실효성 없는 획일적 정책으로 선량한 공무원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업무를 폭탄으로 만든다"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20.1%의 중립/건설적 의견은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며, 646명의 생생한 증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닌, 교육행정 개선을 위한 현장의 제안입니다.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지침 변경 없이는 정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Ⅲ. 종합 분석 결과

1. 핵심 발견사항 요약

□ 설문조사 결과 한눈에 보기

- 부정적 평가: 83.9%(정책 효과 의문+실익 없음)
- 업무 증가: 91.34% (상당히/많이 늘어남 62.91%)
- 가장 강한 영향 요인: 근무지별, 학교규모별, 직렬별 (모두 $p < 0.001$)

□ 현장이 지적인 핵심 문제점

- 업무 과중: "나홀로 실장 업무 폭탄", "연간 3,000건 처리 마비"
- 교직원 갈등: "교무실과 행정실 아수라판", 교감 결재 거부
- 실효성 의문: "빈대 못 잡고 초가삼간", "카드깡 할 사람은 다 한다"
- 현실성 부족: "포스트잇까지 검수", "탁상행정"

2. 회계사고 근절 지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현행 지침의 구조적 문제

○ 문제 1: 획일적 적용 → 차별화 부재



- 현행: 모든 지출에 동일한 검사검수 절차 적용
- 문제점: 1만원 소모품부터 100만원 비품까지 동일 처리
- 개선방안

⑤ 금액 기준별 차등 적용

- 100만원 이상: 현행 유지 (철저한 검사검수)
- 50만원~100만원: 간소화 절차 (필요 시 검사검수 진행)
- 30만원~50만원: 최소 절차 (담당자 확인 서명)
- 30만원 미만: 기존 방식 (별도 검수 불요)


○ 문제 2: 소규모 기관 고려 부족 → 기관과 학교 구분 시행 및 맞춤형 지원

- 현행: 1인 행정실부터 대규모 학교까지 동일 적용
- 문제점: "나홀로 실장 업무 폭탄", "삶의 질 저하"
- 개선방안

-  교육행정기관 우선 시행해 회계사고 근절 효과 검증 후 학교 시행
-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행정기관 우선 시행해 제도의 문제점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를 보완해 학교에 적용
-  학교 규모별 차별 적용
- 1명 규모: 일정금액 이상만 검사검수 적용 및 감사 특례 적용
 - 2-3명 규모: 감사 시 업무 부담 고려(경미한 절차 미준수는 현지조치)
 - 4명 이상: 관리자 및 사업담당자 맞춤형 회계 교육 지원


○ 문제 3: 이중 업무 발생 → 절차 통합

- 현행: 법인카드 사용확인서 + 에듀파인 검사검수 별도 처리
- 문제점: "같은 내용을 두 번 작업", "업무 효율성 저해"
- 개선방안

-  절차 통합 및 간소화
- 법인카드 사용확인서 OR 에듀파인 검수 선택
 - 온라인 구매 시 예외 적용
 - 소액 소모품은 검사검수 생략

○ 문제 4: 사전 소통 부재 → 협치 체계

- 현행: 일방적 지침 시행 후 현장 반발
- 문제점: "현장 목소리 반영 없음", "탁상행정"
- 개선방안

-  정책 수립 과정 개선
- 정책 기획 시 이해관계자 사전 협의 의무화
 - 시범 운영 후 현장 피드백 반영
 - 정기적 현장 의견 수렴 체계 구축

□ 구체적 개선 대책

○ 즉시 시행 방안(지침 보완 및 수정)

- 기관 및 학교 일괄 시행이 아닌 행정기관 우선 시행 후 학교는 나중에 시행
 - 교육행정기관(본청/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우선 시행해 회계사고 예방 효과를 검증 후 학교는 추후 시행
 - 학교 시행 전 이해관계자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실시
- 금액 기준별 차등 적용 기준 마련
- 학교 규모별 적용 방안 마련
- 소액 소모품 제외 기준 마련
- 이중 업무 해소 방안 마련

○ 중기 개선 방안 (3-6개월)

- 에듀파인 시스템 기능 개선
 - 업무 연계: 품의-결제-검수 연계 기능 추가
 - 알림 기능: 검수 요청 자동 푸시 알림
 - 대시보드: 실시간 업무 현황 모니터링
- 교육 체계 구축
 - 지방회계법 제54조에 따른 의무교육 실시(대상: 교장, 교감 등)
 - 역할별 맞춤 교육: 교장-교감-교사-행정실 구분
 - 사례 중심 교육: 회계사고 유형별 예방법
- 지원 체계 강화
 - 1인 행정실: 재정컨설팅 시 업무 부담 고려
 - 매뉴얼 제작 배포: 회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담당자용 학교회계 매뉴얼 제작 보급

□ 정책 대안의 우선순위

○ 1순위: 즉시 완화 조치 (현장 요구 최우선 반영)

- 교육행정기관 우선 시행(제도 검증 후 학교로 확대)
- 금액 기준 도입: 100만원 이상 적용
- 소액 소모품 제외: 사무용품, 간식비 등 예외 조항 신설
- 1인 행정실 별도 기준 마련: (예) 200만원 이상 적용

○ 2순위: 시스템 개선 (효율성 제고)

- 이증 업무 해소: 법인카드 확인서 OR 검수 선택
- 에듀파인 기능 개선: 시스템 개선으로 업무 고도화
- 매뉴얼 제작·배포: 현장 중심 가이드 제작

○ 3순위: 교육 및 지원 (근본적 해결)

- 의무교육 실시: 지방회계법 제54조 활용
- 업무 효율화: 시스템 자동화를 통한 부담 경감
- 일몰기한 설정: 교육 현장 변화에 따른 적절한 지침 운용을 위해 일몰 기한 설정

□ 기대 효과

○ 정량적 목표

- 정책 수용도 향상: 11.49% → 30% 이상 (2배 이상 향상)
- 업무 부담: "많이 증가" 30.57% → 15% 이하 (절반 이하 감소)
- 현장 갈등 해소: 갈등 사례 50% 이상 감소

○ 정성적 목표

- 교무실-행정실 관계: 협력적 관계 복원
- 회계업무 효율성: 처리 시간 및 절차 간소화
- 정책 신뢰도: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 이미지

IV. 결론 및 제언

□ 결론

이번 설문조사는 83.9%의 현장이 현행 정책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 제언

○ 교육행정기관 우선 시행

- 본청/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 우선 시행
- 제도의 문제점 및 예방 효과 등 검증 후 학교 시행
- 학교 시행 전 이해관계자(교장, 교감, 교사 등) 회계 교육 실시
- 로드맵: 교육행정기관 시행 → 효과 검증 → 회계 교육 → 학교 확대

○ 금액 기준 및 소모품 제외 등 지침 변경

- 금액 기준 도입(100만원 이상)
- 1인 행정실 별도 기준 설정(200만원 이상)
- 소모품 등 소액 물품 제외

○ 중장기 과제

-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 수립 체계구축
 - (중요) 본청 주관 학교장 및 사업책임자(교감, 부장교사 등) 회계 교육
 - ☞ 학교 현장에서 회계 지침으로 인한 행정실과 교무실 갈등 완화
- 1~2인 행정실 감사 또는 재정컨설팅 시 지침 완화 적용
- 기관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정책설계(특히 학교 현장 고려)
- 지속적 모니터링과 회계업무 효율화 방안 모색 및 일몰기한 설정

○ 경북교육청에 대한 권고

- 회계사고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습니다.
- 학교 현장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지침으로 변경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회계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